

통일과 북한인식에 대한 남남갈등 원인과 해소 방안

안미영

1. 서론

자산 및 소득격차에 의한 경제력 차이, 지역별, 성별, 세대별 갈등 등 한국사회는 다양한 갈등요소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겪고 있는 지역적, 경제적 갈등과 더불어 최근 한국사회는 성별, 세대별 갈등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분단국가 상태인 한국에서는 다른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오는 남남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이념차이의 주요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식에 대해 성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기존 갈등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저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나 태도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하거나 남북관계가 교착되어 있을수록 남남갈등 문제가 두드러진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기준 또한 자유를 중시하는지, 평등을 중시하는지 하는 학문적·이념적 가치에 따르지 않고 북한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 나뉘고 있으며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등은 보수든 진보든 당시 경제 상황 및 주요 이슈에 따라 대동소이하게 합의점이 있으나 대북정책은 크게 북한을 협력·지원의 대상, 교류협력 대상으로 볼 것인지, 경계·적대 대상으로 비핵화를 우선할 것인지에 따라 정부 정책도 여당의 성격에 따라 상반되게 전개되고 이에 따라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이 확대되었다.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사회 남남갈등의 원인과 현상을 살펴보고, 최근 보수정부와 진보정부 시기의 대북·통일정책, 북한 인식 등에 관한 여론 분석을 바탕으로 통일여론의 흐름과 차이, 인식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남남갈등의 정도를 파악하고 남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일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대화’와 민주평통에서 추진한 ‘평화플랜 원탁회의’ 사례를 살펴보고 남남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남남갈등 원인과 현상

남남갈등이란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와 이에 따른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로 남한 사회 내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한국 정치 집단의 대북 정책은 다른 정책 보다 선명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북한을 적으로 볼 것인지, 협력 대상으로 볼 것인지 대상 인식에서부터 차이를 가지고 대북 정책도 집권 여당의 성격에 따라 방향성을 크게 달리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 북한에 대한 인식은 점점 합의점을 찾아가며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점점 극단으로 쏠리며 보수남한과 진보남한 사이 남남갈등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조한범(2006)은 “남남”이라는 개념은 “남북”에 대한 대칭적 표현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남남갈등은 기본적으로 남북갈등을 전제로 하며 분단으로 인한 남북 갈등구조가 남한사회 내에서 재생산되는 구조 및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남한사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이견과 대립구조가 남남갈등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협의의 의미에서 남남갈등은 남북관계 또는 통일 및 대북정책과 관련된 갈등구조¹⁾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남남갈등은 남북분단 과정과 이후 체제 경쟁 및 이념 대립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의 갈등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분단 이후 이승만 정부 시기 6.25 전쟁을 겪은 상황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적(敵)이었으며 박정희 정부 시기 데탕트의 국제 정세에 따라 1972년 7월 4일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원칙의 대화를 통한 통일에 합의한 바 있지만 선언적 의미가 강했으며 여전히 체제 경쟁과 경제개발 우선 정책 실시 및 남한 내 집권 연장을 위해 북한에 대한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도 북한은 여전히 주적이었으나 국내적으로는 민주화 운동, 국제적으로는 탈냉전과 소련의 붕괴로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계 의식이 완화되고 적이면서 동시에 통일해야 하는 한민족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통일 정책으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 조한범(200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이창현(1991)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핵심을 과도적 통일체제로 ‘남북연합(Korea Commonwealth)’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남북연합을 구성해 남북 간 개방과 교류협력을 실현하고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창현(1991)은 남북연합은 최고의결기구로 ‘남북정상회의’, 남북 정부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 이를 위한 실무문제를 관장하는 ‘공동사무처’ 등을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대표를 파견하는 것과 함께 남북연합기구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평화구역 내 ‘평화시(平和市)’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남북평의회의 경우는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며 통일헌법안을 기초하고 통일국가 건설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를 논의한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이를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거쳐 확정·공포한 뒤,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하나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이때 통일국회는 지역대표성에 입각한 상원과 국민대표성에 입각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로 한다.²⁾

이러한 과정을 밟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향과 남북연합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건설을 제시하고 있다.³⁾

정대규(1990)는 남북연합은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나 연방(federation)과 달리,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이고 특수한 결합형태로 즉 1민족 내부의 2체제 연합 형태로 남북연합 안에서 남북은 각각 주권국가로 남지만 국제법상의 관계가 아닌 국내법에 준하는 특수한 법적 유대관계를 갖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남북연합 안에서 남북관계의 기초가 되는 ‘민족공동체헌장’의 성격은 국가 간 조약이 아닌, 국내법적 협정에 가까우며, ‘7·7선언’에서 남북 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 것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2)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 정대규(1990),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문제연구 14권

라 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이 통일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민족통일을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중간단계를 설정하자는 것이다. 말하자면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체제가 있다는 분단 현실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해 나가고, 여건이 성숙되면 민족 전체의 의사에 따라 정치적 통합을 이루자는 것이다.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후 김영삼 정부를 거쳐 현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이어지면 남북 통일방안의 기본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북인식에 대한 변화와 그에 따른 논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처음으로 진보 정치세력이 집권한 김대중 정부 시기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고 햇볕정책 추진과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북한에서 직접 만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동시에 북한 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좌우 이념대립으로 본격화 되었다.

[6.15 남북 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 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4) 네이버 지식백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 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장 김정일

본격적으로 남남갈등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점에서 신문기사를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햇볕정책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남한 내에서의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햇볕정책의 속도를 제한하고 비판적인 입장에서 주로 제기되었다. 금강산관광이 시작되고 이후 노무현 정부 시기 평화번영 정책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가동과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완화되었지만 동시에 이전 냉전시기보다 현실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은 통일에 대해 비용을 산출하고, 남한 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막대한 비용을 통일을 위해 남한이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남북화해 분위기와 동시에 북한 인식, 통일 방식과 비용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도 커졌으며 이에 따라 진보-보수 정치적 구도에 따라 정책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거치며 기존의 남북화해 정책은 先비핵화, 안보 중심 정책으로 전환

되고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도발로 남북관계는 악화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 2008년 7월 11일 관광객 박왕자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금강산 관광은 중단되었고 2010년 3월 3월 26일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과 남남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당시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보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지만, 정부의 천안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신뢰 정도가 과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천안함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뢰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32.3%,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견이 15.5%로, 전체 응답자의 47.8%가 ‘신뢰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 ‘신뢰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24.0%,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16.0%로, 전체 응답자의 40.0%가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후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진보 진영은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2003년 착공하여 2004년 완공하고 2005년 기업 입주가 시작되면서 남북경제협력의 핵심 사업이었던 개성공단 또한 남북 간 분위기가 나빠질 때마다 통행 제한과 일시적 폐쇄를 겪다가 박근혜 정부 시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단행되자 한국 정부는 전면 중단을 선언한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국민여론도 반반으로 나뉘게 되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잘한 결정 66.6% vs 잘못된 결정 27.4%)에서는 ‘잘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대다수인 반면, 진보층(25.0% vs 67.9%)에서는 ‘잘못한 결정이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으며 중도층(잘한 결정 46.4% vs 잘못된 결정 47.4%)에서는 두 응답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⁶⁾ 남북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모두 중단되었다.

5) 리얼미터(2010.9.13.), 천안함 침몰원인과 국방부 발표에 대한 신뢰 여론조사

6) 리얼미터(2016.2.12.),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관한 여론조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리얼미터, 2016.2)]

진보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대화와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며, 이후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북한을 안보를 위협하는 상대로 인식하고 先비핵화, 後경제지원을 강조하며 북한과의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다. 각 시기에 햇볕 정책과 퍼주기 논란에 대한 남남갈등이 쟁점화 되었고, 보수 정부 시기에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남남갈등이 주요 이슈화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북한을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평창 올림픽 계기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과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판문점 선언을 추진하며 한 단계 나가려던 남북관계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무산 이후로 더이상 진전이 없었고, 이전까지 이어져 온 진보-보수 정부의 남남갈등 요소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북한 문제의 국제화로 남북 간에는 막상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과정을 거쳤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을 담아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뜻깊은 시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열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①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⁷⁾

③ 남과 북은 당국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하였다.⁸⁾

7)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 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⁹⁾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¹⁰⁾

⑤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 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다.¹¹⁾

⑥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¹²⁾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¹³⁾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¹⁴⁾

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0)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1)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2)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3)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4)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②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¹⁵⁾

③ 남과 북은 상호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이 활성화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군사적 보장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군사적 문제를 지체 없이 협의 해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회담을 비롯한 군사 당국자회담을 자주개최하며 5월 중에 먼저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였다.¹⁶⁾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이다.¹⁷⁾

① 남과 북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엄격히 준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¹⁸⁾

③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¹⁹⁾

④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²⁰⁾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15)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6)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7)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8)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19)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20)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하여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²¹⁾

2018년 4월 27일

판 문 점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박명림(2015)은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이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축요인이 되면서 다시 국내문제에 삼투되어 사사건건 이념대립을 강화하고 고착시킨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와 같이 남북관계·대북정책과 국내 정치 및 이념지형을 분석했다.²²⁾

<남북관계·대북정책과 국내 정치 및 이념지형>²³⁾

의제		진보		중도	보수	
		급진	온건	-	온건	급진
북한에 대한 기본 인식		대등/추종	협력/지원	경쟁/협력	경계/협력	적대/흡수
남북관계 단절요인		남한	북한과 남한	북한과 남한	북한	북한
평화 체제	북핵 문제	대미자구책 간섭무용	대미협상요소이자 자구책. 지원과 위협 요소 해소를 통한 해결	대미협상요인. 협상을 통한 해결	북핵 불허. 제재와 협상 병행 해결	북핵 불허. 압박과 제재를 통한 해결
	평화 체제	북미 평화협정. 한미동맹 해체.	평화관리. 남북-북미	평화관리. 남북-북미	남북평화협정. 주변국 동의.	남북평화협정. 주변국 동의.

21)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4.27 판문점 선언'

22) 박명림(2015), 국민합의 대북·통일정책, 한반도포럼 종합토론

23) 박명림(2015), 국민합의 대북·통일정책, 한반도포럼 종합토론

의제		진보		중도	보수	
		급진	온건	-	온건	급진
		주한미군 즉각 철수	평화협정 투트랙. 한미동맹 대등화. 미군주둔 잠정허용	평화협정.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계속 주둔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영구 주둔
	전작권 환수	주권문제. 자주성회복. 전작권 연기는 노예 근성	주권문제. 자주성회복. 남북관계 안정에 도움	안보효율성 및 대북억지력. 군사협력 중요	안보효율성 및 대북억지력. 생존문제	안보효율성 및 대북억지력. 통일준비 생존문제
		즉각 환수	신속 환수	점진 환수	안보확보 이후 신중한 점진 환수	자주적 안보태세확립 이전 환수 불가
	NLL	미군의 일방적 경계선. 북한주장 동의	협약 대상 평화지대 설치. 경제적 접근 병행	이중성격 협약대상, 안보를 고려 신중히 접근	영토선 협약불가	영토선 협약불가
	군사 충돌	대북수구 정책의 산물	북의 책임 안보 공고화	북의 책임 안보 공고화	북의 호전성 강력히 대처	북의 호전성 강력히 응징
통일 문제	통일 방안	분단타파 급진통일 대등통일	평화공존 점진통일 통일회의	현상유지 점진통일 통일회의	현상유지 통일회의 흡수통일	분단타파 흡수통일
	통일 체제	1민족 1국 2체제연방론	남북연합 연방	남북공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남북공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체제
	통일 외교	민족 자주 원칙	남북+국제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국제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국제 (한미동맹+ 한중협력)	남북+국제 (한미동맹 중심)
인도 주의	인권	지도부-주민 분리 반대. 제기자체 반대. 실효성 부인. 남북관계 악영향	당위성 인정. 법률제정 반대. 복체제 위협 으로 오인될 가능성 우려	당위인정. 법률제정 찬성. 특수성 고려 신중히 제기	지도부-주민 분리. 인권문제 제기 및 인권법 제정 찬성	지도부-주민 분리. 인권문제 제기 및 인권법 제정 적극 촉구. 북한주민과의 연대 추진
	탈북자	배척. 적대 조용한 외교	수용 조용한 외교	수용과 지원 조용한 외교	수용. 지원 연대 공개외교	수용. 지원 연대 공개외교 북한붕괴 압박 수단
	인도적 지원	무조건적 지원	정경분리	유연한 상호주의	상호주의	철저한 상호주의

북한인식과 대북정책이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척도가 되고 점점 극화되어 집권 정부에 따라 한반도 정책이 단절되고 방향이 180도 바뀌는 가운데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남남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주요 의제에 대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토론과 숙의, 합의에 따라 양극단의 입장에서 점차 중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 과정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이슈에 따라, 진영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정부 북한 관련 주요 사건]

한국 정권	북한 정권	주요 사건	미국 정권
이승만 (1948~1960)	김일성	- 1950.6.25. 전쟁 - 1953.7.27. 휴전협정	아이젠하워 (공화당) 존 F. 케네디 (민주당)
박정희 (1963~1979)	김일성	-1968.1.21. 무장공비 침투사건(김신조 사건) - 1972.7.4. 7.4남북공동성명 - 1973.6.23.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 1976.8.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린든B. 존슨 (민주당) 리처드 닉슨 (공화당) 제럴드 포드 (공화당) 지미 카터 (민주당)
전두환 (1980~1988)	김일성	- 1982.1.22.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발표 - 1983.10.9.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 1987.11.29. KAL기 폭파사건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노태우 (1988~1993)	김일성	- 1988.7.7선언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한 선언 - 1989.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91.9.17. 남북 UN 동시분리 가입(160, 161번째) - 1991.12.13. 남북기본합의서	쥘리안 HW 부시 (공화당)
김영삼 (1993~1998)	김일성 (~1994) 김정일	- 1993.3.12. 북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 1994.8.1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1996.9.18.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빌 클린턴 (민주당)
김대중 (1998~2003)	김정일	- 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 1998.11.18. 금강산 관광 시작	빌 클린턴 (민주당) 조지 W. 부시

한국 정권	북한 정권	주요 사건	미국 정권
		- 2000.6.13.~15. 제1차 남북정상회담(평양) - 2000.8.15. 제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 2000 시드니 올림픽 남북공동 입장 - 2002.6.29. 제2연평해전	(공화당)
노무현 (2003~2008)	김정일	- 평화번영정책 - 2003. 개성공단 착공, 2004. 개성공단 완공 및 2005. 기업 입주 - 2006.10.9. 제1차 핵실험 - 2007.10.2.~4.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	조지 W. 부시 (공화당)
이명박 (2008~2013)	김정일 (~2011) 김정은	- 상생·공영 정책, 비핵·개방·3000 - 2008.7.11.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 2009.5.25. 제2차 핵실험 - 2010.3.26. 천안함 피격사건 - 2010.11.23. 연평도 포격전 - 2013.2.12. 제3차 핵실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박근혜 (2013~2017)	김정은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 2016.1.6. 제4차 핵실험 - 2016.9.9. 제5차 핵실험	버락 오바마 (민주당)
문재인 (2017~2022)	김정은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 - 2017.9.3. 제6차 핵실험 - 2018.4.27. 제3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남측) - 2018.5.26. 제4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북측) - 2018.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 2018.9.18.~20. 제5차 남북정상회담(평양)\ - 2019.2.27.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2020.6.16.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3. 한반도 정세 및 대북정책 · 북한인식 여론

가. 문재인 정부

1) 한반도 정책 및 정세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계승 · 발전 시키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으로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 동향에 따르면(2017년 2분기)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사실을 보도하면서도 정부 출범 5일 만에 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태도를 시험하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 단호히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분 단위로 대응을 공개하면서 안보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 또한 문 대통령은 5월 17일, 취임 후 첫 부서 순시 및 업무 보고를 위해 국방부를 찾아 “북한의 도발 및 핵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북핵 대응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6월 1일 제주포럼 영상축사에서 ‘항구적 평화체제’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구상, 담대한 실천을 시작할 것”이라며 “외국 역할론에 기대지 않고 한반도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피력했다.
- 문재인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 동향에 따르면(2017년 2분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6월 30일 오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채택,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데 합의했다.
- 한·미 양국이 동맹을 다지고 북핵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미국으로부터 이끌어냈다는 외신들의 평가가 지배적, 한편, 문 대통령은 미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폐기를 결정할 유일한 인물이므로 대화가 필요”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으며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북정책 기조를 천명했다.
- 그러나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향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5월 9일, 김정은 위원장 추대 1주년을 맞아 “핵 무력 완

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했다” 고 업적을 치켜세우며 “핵탄두 폭발 시험의 대성공으로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고 자평했다.

-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포럼 개막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이 갑자기 중단되는 상황 발생,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다시 미사일 엔진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월 25일 ‘92호 공장’ (핵공장)을 비공개로 현지지도 하면서 “핵무기 보관 관리를 비밀로 하라” 고 지시한 내용이 담긴 북한의 극비문건을 한국 언론이 입수해 보도함으로써 핵무기 관련 김정은의 지시 언급을 최초로 확인했다.²⁴⁾
- 한반도 위기설 대두, 4월 6~7일 열린 미중정상회담을 통해서도 기대했던 북핵 해법이 도출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정세를 비관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특히 매년 4월은 북한의 주요 정치 일정이 몰린데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선제타격 주장과 국내 대선정국의 불확실성까지 맞물리면서 ‘4월 한반도 위기설’ 이 증폭되었다.²⁵⁾
- 민주평통 정세분석에 따르면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핵항공모함전단 한반도 재배치 등 대북 압박 강화와 북한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맞물리면서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채권, 원화 환율이 일제히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로 이어져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과 북한이 상호 비난전을 펼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4월 21일 발표한 논평에서 대북제재 압박과 관련 “과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 이라고 중국을 맹비난한데 대해,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이 전략적으로 북한을 견뎌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북한의 배후가 되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려야 한

24)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25)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다” 고 대응했다.

- 워비어 사망으로 북한 인질외교 난관에 봉착,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3학년 오토 워비어(22)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북한의 정치적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 중 심각한 혼수상태로 6월 13일 미국에 신병이 인도되었으나 6일 만에 사망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잔혹한 정권’ (brutal regime)이라고 북한 정권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미국 언론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비판하였다. 이로 인해 북한에 대한 미국 사회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으며, 미국 사회가 중시하는 ‘근본’ 을 건드린 후유증으로 북·미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김정남 살해 사건을 놓고 말레이시아 외교관과 가족을 볼모로 삼던 북한식 인질외교가 전례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²⁶⁾

2) 통일여론

- 민주평통의 2017년 2분기 평화통일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첫 조사에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81.4%로 2017년 1차 조사에 비해 6.2%p 상승, 응답자 10명 중 8명이 통일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함께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 및 통일 이후 국가발전 공감도 역시 63.7%로 2017년 1차 조사에 비해 상승,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²⁷⁾
-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우선 과제로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 국민협약 추진’ 이라는 응답이 48.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협치’ 에 대한 높은 열망을 표출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일 차세대 전문가 양성’ (20.0%), ‘지역단위의 시민 통일교육’ (9.8%), ‘통일전시관 등 통일센터 설치’ (6.7%)의 순으로 응답,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좋아질 것’ 이라는 응답이 48.1%로 2017년 1차 조사에 비해

26)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27)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13.9%P 급상승, 최근 2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²⁸⁾

- 민주평통 여론분석(2017)에 따르면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57.6%)는 회의적인 시각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식은 ‘경제 내지 적대 대상’ 이미지가 44.3%, ‘협력 내지 지원 대상’ 이미지가 39.8%로 조사되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인해 부정적 인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5.1%P↑)하였다.
- 민주평통 여론분석(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국가간 정상외교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74.0%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에 대해서는 ‘중국’이 52.6%, ‘미국’이 37.1%로 조사, 여전히 중국과 미국 변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 새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대북·통일정책 우선 추진과제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응답이 59.6%로 가장 높게 조사 되었으며 이어서 ‘북한인권 개선’ (25.7%),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문제 해결’ (23.7%), ‘남북 사회·문화·체육교류 활성화’ (22.8%), ‘남북시장 통합을 바탕으로 통일의 기반 구축’ (21.9%),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제도화’ (19.5%),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으로 경제 신성장 동력 제공’ (18.2%) 순으로 응답하였다.²⁹⁾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민간 교류협력의 유연한 추진방침에 대한 공감도도 각각 76.9%와 74.4%로 높게 조사되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³⁰⁾

(정책배경)

- ‘평화’ 최우선 추구

28)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29)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년 2분기)

30) 통일부(2017),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평화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이자 정의이며,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이 갈등 없이 공존할 수 있고 통일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릴 것입니다.

세계적인 냉전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반도는 군사적 대치 속에 불안정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우발적인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도발과 제재, 다시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한 정책 추진

우리는 북한 붕괴 불원,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불추구 입장을 통해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시켜 나가하고자 합니다.³¹⁾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때로는 제재·압박을, 때로는 대화·협상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고려하는 포괄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남북간 상호 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근원적·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³²⁾

- ‘일관성’과 ‘지속성’ 추구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존중하고, 계승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국민협약(국내적 측면), 남북기본협

31) 통일부(2017), 문재인외 한반도정책

32) 통일부(2017), 문재인외 한반도정책

정(남북관계 측면), 한반도 평화협정(국제적 측면)을 체결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³³⁾

- 정책의 영역을 동북아와 국제사회로 확장

정책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와 국제사회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익을 넘어, 주변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³⁴⁾

우리 경제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로 점차 활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결된다면,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과 주변국들 간 경제적 이해가 증진된다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협력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까지 아우르는 평화와 공동 번영의 질서를 창출해야 합니다.³⁵⁾

(정책 비전)

- 평화 없이는 안보도 경제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평화 공존’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이자 비전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4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에는 대결과 긴장의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평화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자 최고의 국익이며,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위한 토대입니다. ‘평화 공존’은 남과 북 주민 모두가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고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평화 공존’은 그 자체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남북간 평화를 제도화하여 서로에게 위협받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 민족 동질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³⁶⁾

33)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34)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35)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36)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 ‘공동 번영’은 남과 북이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갈 것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를 지향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함과 동시에, 남북 주민 모두 혜택을 누리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협력의 범위를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동북아 이웃국가로 확장한 ‘공동 번영’을 추구합니다. 우리 경제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여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이웃국가도 함께 이익을 누리는 열린 번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되는 관계 속에서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평화와 경제협력을 보장하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관계 속에서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촉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³⁷⁾

(3대 목표)

- 북핵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우리 민족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우리는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³⁸⁾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단순한 문서상의 합의를 넘어, 평화가 실질적·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³⁹⁾

-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상호 존중·화해 협력·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

37) 통일부(2017), 문재인외의 한반도정책

38) 통일부(2017), 문재인외의 한반도정책

39) 통일부(2017), 문재인외의 한반도정책

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간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어렵게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⁴⁰⁾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남북간 ‘상호 신뢰’와 ‘호혜성’에 기반한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확보하고 북한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공동 번영의 경제적 토대가 마련되고, 경제통합의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⁴¹⁾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우리의 경제영역을 대륙을 넘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남북한을 넘어, 중국·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국가와 경제적으로 연결되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관련국과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북핵문제에 전환점이 마련되면 북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간, 동북아 국가들간 상호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⁴²⁾

환동해권: 원산·함흥, 단천, 나선,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벨트

환서해권: 수도권,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산업벨트

접경지역: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 통일경제특구를 연결하는 환경·관광벨트

40)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1)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2)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대 전략)

- 단계적 ·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 ·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면서,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제재와 압박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도발을 중단시키고,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가운데,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간 정치 · 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함께 협의하여,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⁴³⁾

-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과거 남북 대화가 활발할 때 북핵문제의 진전을 이루고, 한반도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금창리의 흑 발생시 우리의 구상을 미국에 전달, ‘페리 프로세스에’ 에 참고, 2005년 6자회담 교착 상황에서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9 · 19 공동성명 채택 기여, 2007년 BDA문제 대두시 우리측 평화체제 구상을 미국에 전달, 2 · 13 합의 체결 촉진

남북간에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통일국민협약’ 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통일문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합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내 ‘서로 다름’ 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공통분모를 더 넓혀감으로써, 논쟁과 갈등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43)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남북간 합의를 법제화하여,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북한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남북간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⁴⁴⁾

-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경제 분야는 물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으로 고통받는 이산가족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영유아 등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의 상대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이들에 대한 생활밀착형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확대·장려하여,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북 경제공동체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남북이 공존공영하며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서의 자연스러운 통일’을 추구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 모두가 나 자신은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5대 원칙)

- 우리 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개방과 협력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와 번영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⁴⁵⁾

44) 통일부(2017), 문재인외 한반도정책

45) 통일부(2017), 문재인외 한반도정책

- 강한 안보,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보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지키기’를 넘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정착 등 ‘평화 만들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⁴⁶⁾
- 상호 존중,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붕괴·흡수통일·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발전하고 호혜적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⁴⁷⁾
- 국민 소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정책을 채우고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화하여, 통일문제에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도출해 나가겠습니다.⁴⁸⁾
- 국제 협력,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고’를 통해 이웃나라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⁴⁹⁾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사]

2017-08-1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

46)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7)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8)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49) 통일부(2017), 문재인인의 한반도정책

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분 한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

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묵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서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그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과 독립유공자들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윤석열 정부

1) 한반도 정책 및 정세

-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다.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확대해나가며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외교·통일·안보분야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대북통일 정책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위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 남북관계 정상화와 국민과 함께 하는 통일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책으로 남북교류협력 보다는 북한 비핵화에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정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제안보 외교 추진,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이며 국방정책은 국방혁신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강화, 한미 군사동맹강화 및 국방과학기술협력 확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 수출 확대, 병영환경 조성 및 정신전략 강화 등으로 한미 군사동맹강화를 기반으로 북한 핵미사일을 억지하겠다는 정책이다.
- 윤석열 정부는 억제력과 국제협력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원칙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지만, 일시적으로 전쟁을 피하는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남북 신뢰 구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평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하는 힘에 의한 평화구축 정책을 추진할 것임으로 표명하고 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획,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으로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3국 협력을 통한 해결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및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비판적 입장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 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힘써온 독립운동은 1945년 바로 오늘, 광복의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 공산 세력에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과정을 통해 계속되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약소국이 강대국에 의해 억압되고 박탈된 국민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주권 국가를 세우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적 사명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함께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복절인 오늘 우리는 과거에서 미래를 관통하는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의미를 다시 새겨야 합니다. 역사적 시기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그 성격과 시대적 사명을 달리하며 진행되어온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조국의 미래가 보이지 않던 캄캄한 일제 강점기에 자신의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며 국내외에서 무장 투쟁을 전개하신 분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서 무장 독립운동을 길러내신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하고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할 민족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 국내외에서 교육과 문화 사업에 매진하신 분들,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신 분들, 진정한 자유의 경제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신 산업의 역군과 지도자들, 제도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독립운동가라는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미래 번영의 출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입니다.”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인 자유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

와 동북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저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국제 신인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저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기초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고 보호 시설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더욱 세심하게 챙길 것입니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초유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는 국민들께 큰 피해와 고통을 안겼습니다. 재난은 늘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더 세심하고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 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약과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약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민간 부문이 도약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우리를 더 빠른 도약과 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 발전을 추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기 역시 첨단과학 기술의 접목으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는 험난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믿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냈습니다. 자유를 되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으로서 현재도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준 우리의 헌법 질서는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위대한 독립 정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함께 연대하여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독립운동에 헌신하신 분들의 뜻을 이어가고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부여된 이 세계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전문] 8.19. 조선중앙통신

할 말이 그렇게도 없었거나 또 하나마나한 헛소리를 했을바에는 차라리 입을 웅다물고있는편이 체면을 유지하는데 더 리로웠을것이다.
윤석열의 《8.15경축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민심도 떠나가는 판국에 윤석열이 애당초 그런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나았을듯싶다.

내가 윤석열을 걱정해서 이 말을 해주는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알 터이고 하도 남쪽동네에서 우리의 반응을 목뺨들고 궁금해하기에 오늘 몇마디 해주는것이다.

만약 연단에 정 나서고싶었다면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품들여 머리를 굴렸기에 그렇게도 체면 하나 제대로 챙길 말을 고르기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윤석열은 온통 《공산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것따위의 궤변과 체제대결을 고취하는데만 몰념하였다.

입에 담기 참으로 미안하다만 역시 개는 엄지든 새끼든 짓어대기가 일쑤라더니 명색이 《대통령》이란것도 다를바 없다.

가장 역스러운것은 우리더러 격에 맞지도 않고 주제넘게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무슨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수 있는 《과감하고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는 황당무계한 말을 줄줄 읽어댄것이다.

한때 그 무슨 《...운전자》를 자처하며 못사람들에게 의아를 선사하던 사람이 사라져버리니 이제는 그에 절대 짝지지 않는 제멋에 사는 사람이 또 하나 나타나 권좌에 올라앉았다.

이미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북남관계를 개선할 그 무슨 구상이라도 품고있는듯 뉘새를 피운데 이어 미국과 주변국들에 설명해가며 리해와 지지를 청탁해대는 등 나름대로 술한 품을 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내놓은 《구상》이라는것이 참 허망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소위 《대통령》이라는자가 나서서 한다는 마디마디의 그 엉망같은 말들을 듣고 앉아있자니 참으로 그쪽 동네 세상이 신기해보일 따름이다.

정녕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인물이 저 윤아무개밖에 없었는가?

《담대한 구상》 ?

그러면 내가 그 허망성을 한마디로 대답해주겠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푸른 대양을 말리워 뿔밭을 만들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실현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북남관계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할런지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니 그 나름대로의 《용감성》과 넘치게 보여준 무식함에 의아해짐을 금할 수 없다.

몇마디 충고하고자 한다.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년전 리명박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력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 베껴놓은 것도 가관이지만 거기에 제식대로 《담대하다》는 표현까지 붙여 놓은 것을 보면 진짜 바보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북이 비핵화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 것을 알거나 하는지 모르겠다.

력대 선임자들은 물론 하내비처럼 섬기는 미국까지 어찌지 못한 《북핵 포기》의 헛된 망상을 멋모르고 줄줄 읽어가는 것을 보자니 참으로 안됐다 하는 안스러움, 분명 곁에서 잘못 써준 글이겠는데 아직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냅다 읽어버렸다는 불쌍한 생각이 든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권좌에 올랐으면 2~3년은 열심히 일해봐야 그제서야 세상돌아가는 리치, 사정을 읽게 되는 법이다.

어느 누가 자기 운명을 강낭떡 따위와 바꾸자고 하겠는가.

아직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찌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자들에게 보내줄 것은 쓰거운 경멸뿐이다.

북남문제를 꺼내들고 집적거리지 말고 시간이 있으면 제 집안이나 돌보고 걱정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가뜩이나 경제와 민생이 엉망진창이여서 어느 시각에 쫓겨날지도 모를 불안속에 살겠는데 언제 그 누구의 《경제》와 《민생》개선을 운운할 겨를이 있겠는가.

우리 경내에 아직도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 들여보내며 우리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침해하는 악한들이 북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과 《의료지원》 따위를 쫓겨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격렬한 증오와 분격을 더욱 무섭게 폭발시킬뿐이다.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래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과렴치한이가 다름아닌 윤석열 그 《위인》이다.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자
체가 싫다.

《담대한 구상》으로도 안된다고 앞으로 또 무슨 요란한 구상을 해가지
고 문을 두드리겠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윤석열은 자기 패당들이 때없이 나서서 무식하게 내뱉는 대결적 망발들
이 어떤 큰 위협을 키우게 되겠는가를 깊이 걱정해 보는것이 좋을것이
다.

부언하건대 우리와 일체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한 우리의 권
언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

끝으로 한마디 더, 참으로 안됐지만 하루전 진행된 우리의 무기시험발사
지점은 남조선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일대가 아니라 평
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음을 밝힌다.

늘쌍 《한》미사이의 긴밀한 공조하에 추적감시와 확고한 대비태세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어찌서 발사시간과 지점 하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지, 무기체계의 제원은 왜서 공개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궁
금해진다.

제원과 비행자리길이 알려지면 남쪽이 매우 당황스럽고 겁스럽겠는데
이제 저들 국민들앞에 어떻게 변명해나갈지 정말 기대할만한 볼거리가
될것이다.

주체111(2022)년 8월 18일

평 양(끝)

최근 담화 내용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주의 입
장을 확고히 천명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선비핵화 후지원의 구상을 제안
했으며 이에 대한 북한측은 원색적인 비난으로 핵은 국체이며 운명으로
협상의 되지 않으며 앞으로 남측과 상대하지 않겠다, 서로 의식하지 말
고 살자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정부 출범이후 북한은 도발을 이어 갔는데, 5월 12일 평양 순안 일대 단거리탄도미사일 3발 발사, 5월 25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ICBM 1발, KN-23 2발 발사, 6월 5일 평양 순안,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 발사, 6월 12일 오전 서해안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 가량 발사, 7월 10일 오후 서해상으로 방사포 2발 발사, 7월 11일 서해상으로 재래식방사포 발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한 8월 17일 오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 관계 경색,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지 등 불안 요소가 높아지고 있는 정세이다.

2) 통일여론

- 민주평통의 2022년 2분기 평화통일 여론 동향을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대화의 문을 열어두되 도발엔 단호한 대응’ 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도발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 의지를 밝힌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에 63.1%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성별, 연령대, 지역에 관계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공감하는 비율이 우세하지만 이념 성향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한 온도차이는 존재한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과반수가 공감하지만 60세 이상의 공감의 견 수준이 69.9%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30대(67.9%), 20대(65.9%) 순이며 40대(54.7%)와 50대(54.6%)의 경우 공감 수준이 타 연령집단 대비 10%가량 저조하게 나타났다. 60세 이상 남성과 2030 남성의 공감 응답 비율은 70%를 상회하고 2030세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 4050세대는 남성보다 여성의 공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성별 간의 인식이 다른 양상도 관측된다. 또한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하여 보수 계층은 86.2%가 공감한 반면에 진보 계층의 공감 수준은 39.8%에 불과하여 이념 성향에 따라 최대 46.4%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정권 초기 대북정책에 대해 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실망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체로 공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보수 성향에

서의 지지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아직은 북한 관련 이슈가 두드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도발 또는 남북관계 변화 추이, 한미 공조 등의 성과 등에 따라 정책에 대한 공감 정도에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정과제 중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정상화’가 동시에 중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30.5%), ‘남북관계 정상화’ (30.3%)가 우선순위를 나타냈으며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17.2%),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16.6%) 순이다. 2030세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대한 선호가 우세, 4050세대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선호가 우세하다.

이념 성향에 따라 통일·대북정책 국정과제별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보수 성향 계층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46.3%)를 가장 우선시한 반면, 진보 성향의 계층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41.4%)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북한 비핵화’ 우선 인식은 이념성향이 보수에 가까울수록, ‘남북관계 정상화’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우선 인식은 진보에 가까울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38.4%), ‘경계·적대 대상’으로 보는 집단에서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41.8%)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다수로 나타난다. 한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북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의 42.1%는 국제협력에 초점을 둔 과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22.4%, 한·미·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19.7%를 선호했다. 북한 문제가 점차 특수한 남북관계라는 인식보다 국가 대 국가, 국제 관계를 통한 접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동시에 남북관계에 중점을 둔 과제 남북대화 재개 26.5%, 인도적 지원 14.8%도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상대적으로 대내적 과제인 국민적 합의 도출은 13.8%로 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2030 남성은 ‘한·미·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은 비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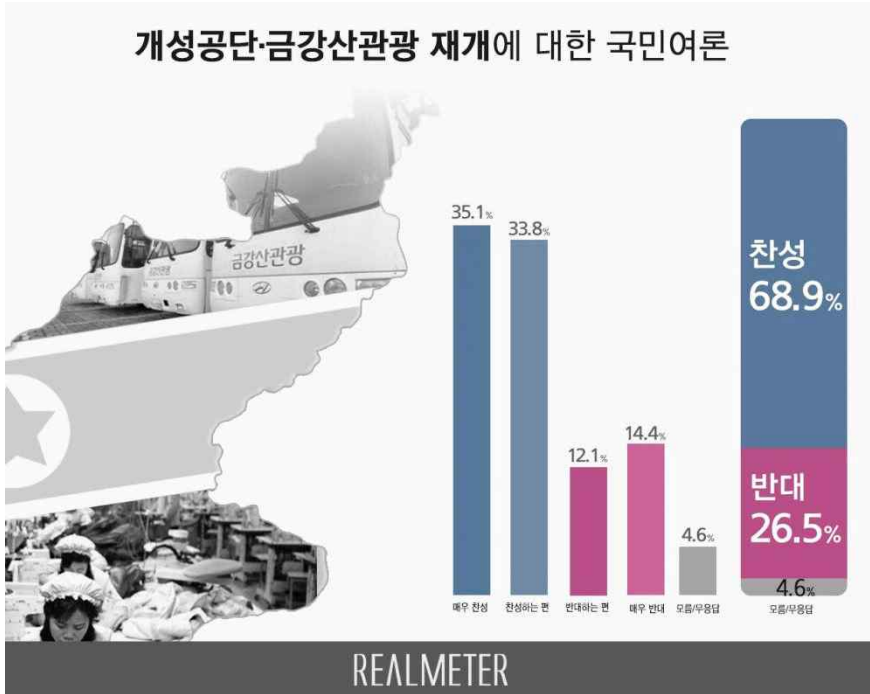
집계, ‘남북대화 재개’ 나 ‘인도적 지원’ 을 상대적으로 우선시한 2030 여성과 다소 큰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남북대화 재개’ 에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남성(36.4%) 집단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집계되어 대북정책 과제에 대한 성별·세대별 차이가 드러난다.

이념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현 시점에서 ‘남북대화 재개’ 를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던 반면에, 보수층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와 ‘한·미·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응답이 높아 이념성향에 따른 인식 차이가 관측되어 보수는 국제 협력에 초점을 둔 과제, 진보는 남북관계에 초점을 둔 과제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고 중도는 두 과제 유형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북한을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경우 ‘남북대화 재개’ 와 ‘코로나19 백신 제공 등 인도적 지원’ 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반면에 ‘경제·적대 대상’ 으로 인식하는 집단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 와 ‘한·미·일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여 대북인식 차이에 따른 대북정책 과제 우선순위의 견해 차이가 확인된다.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해서는 압박정책(군사적 대응 및 대북 제재 강화) 선호가 우세한 가운데 외교적 대응의 선호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 ‘한미 확장억제 등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 를 선호한 비율은 30.8%, ‘대북제재 강화’ 를 선호한 비율은 17.3%로 압박정책 성격의 두 응답을 합한 비율은 48.1%를 차지하며 ‘외교적 해법 모색’ 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 응답이 45.5%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과 한반도 정책 사이에는 여전히 이념적 차이와 우선순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를 거치며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모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면서 동시에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제재 등 단호한 결단을 취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경우 코로나 관련 지원이나 취약 계층 지원 등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남북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복원하는 방안에도 많은 국민들이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국민여론50]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협상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한편으로 실현 가능한 안전부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게는 일단 협상할 수 있는 안전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 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 북-미 관계, 나아가 한-북-미-중-일-러 6자 간의 협의와 소통, 협상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내에서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념별, 연령별 남남갈등 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국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와 공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며 대북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4.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적 합의 형성 방안

50) 리얼미터(2019.2.28.),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여론조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인식과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관련 주요 사안에 따라 남남갈등은 여전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에 더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며, 정권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는 정책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남남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2019년 통일부에서는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민주평통에서는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추진했다.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둘러싼 첨예한 이념의 간극을 좁히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남갈등을 다소나마 완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대로 시작되었으며,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과 시각들을 통합하여 우리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의 질을 높여 정책을 집행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차승주, 2020:11-12)

[2018년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주요 의제⁵¹⁾

구분	의제	주요 내용
의제 1	북한을 보는 시각 ⁵²⁾	북한은 적대와 극복의 대상인가, 존중과 협력의 대상인가?
의제 2	한반도 미래상	한반도의 미래상은 한 체제로의 통합인가, 두 체제의 공존인가?
의제 3	평화·통일에 기대되는 효과 ⁵³⁾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
의제 4	통일교육의 강조점	통일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의제 5	평화·통일과정에서 필요한 역량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
의제 6	평화·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서 지도자와 시민 중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한가?
의제 7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관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51) 통일협약추진위원회(2018: 16-45)

		할 국제관계는 무엇인가?
의제 8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는 어떤 경로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의제 9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남북 간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하여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하는가?
의제 10	남북경제협력의 상대적 이득	남북의 경제협력은 어느 쪽에 더 이로운가?
의제 11	개성공단 재개 시점	개성공단 재개는 어떤 속도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의제 12	남북교류협력 과정의 성평등 보장	남녀 간 동등한 기회 보장, 남북교류협력의 필수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3년간 진행된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세대, 연령,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2018년 시범사업으로 권역별, 대상별 500여명이 토론에 참여하였으며, 2019년 사회적 대화는 4개 권역과 미주지역까지 930여명이 참여하여 진행되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별 2회 현장 60명, 온라인 227명이 참여 하였다.(권속도, 2021:103) 참여 인원 규모의 아쉬움과 의제 범위가 넓어 의제마다 충분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지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었고 토론회 등을 거쳐 통일국민협약안이 마련되었다.

[통일국민협약안]

<전문>

통일국민협약은 남과 북의 대결과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기 위한 사회적 협약이다.⁵⁴⁾

해방 이후 한반도는 남북으로 갈라져 끝내 전쟁까지 치렀다. 그 후에도 불안정한 휴전상태에서 남과 북은 대결과 적대를 계속해 왔다. 한반도의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막대하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작 당사자인 국민들이 소외되고 사회

52) 권속도(2021),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53) 권속도(2021),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54)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 협약안(2021)

적 합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한반도 문제는 국민들의 실질적 요구나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정쟁거리로 전락하게 되었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렸다. 그 결과 남북관계에서는 혼선과 협상력 약화가 초래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남남갈등’이라 불리는 소모적인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였다.⁵⁵⁾

통일국민협약은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정파와 이념을 넘어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통일국민협약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는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교가 균형 있게 두루 참여했다. 2018년 이래 지난 4년간 전국에서 수천명의 시민과 활동가, 교사와 시민들이 평화와 통일에 관한 새로운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했다. 의제개발, 발제, 질의응답과 자문에 다양한 입장의 전문가들이 동참했다. 통일국민협약안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선정된 국민들이 오랜 시간의 숙의를 거쳐 스스로 마련했다.⁵⁶⁾

통일국민협약안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숙의 결과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공식협약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소 온전한 사회협약으로 완성된다. 통일국민협약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주변 환경 변화와 사회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되고 발전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어야 하고 제도와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주변국의 정부와 민간의 대화와 합의로 확장되어야 한다.⁵⁷⁾

<협약본문>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가 주최한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에 참가한 전국의 시민참여단은 2020년 7월 6일부터 2021년 6월 26일까지 4개 권역별 예비 대화와 총 8일간의 전국 종합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과정과 방법에 관해 숙의하여 다음의 협약안을 채택한다.⁵⁸⁾

55)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 협약안(2021)

56)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 협약안(2021)

57)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 협약안(2021)

58)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 협약안(2021)

제1장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반도는,
군사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다
평화적으로 비핵화된 한반도다.
인권과 삶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복지국가다.
공정한 사회체제가 정착된 한반도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반도다.
사회적 합의로 갈등이 해소되는 한반도다.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한 한반도다.
다양한 문화교류가 활발한 한반도다.
남북철도 연결로 세계여행이 자유로운 한반도다.
세계가 찾는 문화의 중심지 한반도다.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된 한반도다.
기술과 자원을 공동개발하는 한반도다.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 한반도다.
남북 상호간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국제사회와 인도적 지원협력이 이루어지는 한반도다.

남북한 주민은 정부와 더불어 통일 과정의 주체가 되고,
한반도는 평화·통일의 모범이 된다.

제2장 한반도 미래상 실현의 과정과 방법

국민 참여와 합의형성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를 도출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한다.
남북한 주민이 함께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대북 통일정책 일관성 확보

통일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한다.
수립된 통일 정책을 실현하고 유지한다.
통일을 위한 법안을 제·개정하고 체계를 정비한다.
남북한 대화를 정례화한다.
남북공동의 대화와 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남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지속한다.

한반도 군사갈등 해소와 비핵화

군사적 위협이 해소된 평화협력 체계를 정착시킨다.
한반도 주변국의 군축 협력을 이끌어낸다.

주변국 관계

남북과 주변국의 외교적 관계를 개선한다.
통일의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홍보한다.
남북이 통일에 대해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낸다.

인도지원협력과 개발협력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산가족간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남북한이 사람과 동·식물의 전염병에 대한 대처와 방역에 협력한다.
한반도의 자연생태계를 남북 상호 협력하여 관리·보존한다.

사회·문화 교류협력

남북이 지속적으로 문화 교류를 한다.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한다.
남북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언어·역사·문화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역사 인식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남북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남북한이 언론을 개방하고 정보를 교류한다.

남북한의 실상을 투명하게 보도한다.

경제협력과 남북균형발전

남북한의 상호체제 존중과 경제협력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남북한이 경제·자원 통합을 구체화한다.

남북한 공동으로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정비한다.

평화·통일 교육

남북이 통일에 대한 공동교육을 실시한다.

2021. 6. 26.

통일국민협약안 채택 사회적 대화 시민참여단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 민주평통 평화통일 원탁회의

민주평통 또한 2018년부터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추진하여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처음 개최된 대구에서는 평화와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사회단체 회원, 대학생, 대구평화통일포럼 회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결방안,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실천과제를 소주제로 공론 토론을 펼쳤다. 우리사회의 평화와 통일의 걸림돌로 이념의 양극화(65.3%), 남북격차(45.6%), 국제관계(42.3%), 통일의지 부족(35.6%), 통일논의의 정치화(31.8%)를 꼽았으며, 두 번째 주제인 우리사회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해결방안으로 남북교류(62.9%), 북한 비핵화(48.7%), 지속가능한 통일정책(47.8%), 북한바로알기(37.5%), △정부의 적극적 정책(37.5%)을 선정했다. 세 번째 주제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구 시민의 실천과제로 평화 통일교육 강화(69.2%), 대구-북한 간 문화교류

(52.2)%, 시민사회 간의 지속적 논의와 협력의 장 유지(50%), 통일을 대비한 매뉴얼 개발(45.5%), 대구시민 참여 토론회 개최(43.3%)를 도출했다.

이어 광주 평화통일 원탁회의 300여명, 대전 평화통일 원탁회의 400여명, 서울 평화통일 원탁회의 700여명이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2018년에만 1,650여명이 참여하여 규모 있는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주제 또한 걸림돌, 해결방안, 실천과제로 집중하여 심도깊은 논의와 지역별 구체적 과제를 도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2019년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미서부지역,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해외에서도 개최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대전, 울산, 전남, 세종, 부산, 충남, 경남 등에서 이어 개최되었다. 미서부 원탁회의에서는 ‘평화와 통일이 염원만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국내와 마찬가지로 이념의 양극화(61.4%)를 가장 큰 이유로 보았고, 분단으로 인한 남북격차(47%), 북한의 위협 상존(46.6%), 통일 논의의 정치화(36.4%), 자국 중심의 국제관계(36%)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제2주제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재미동포사회의 실천과제’로는 차세대 통일 공감대 확산(43.8%), 평화통일을 위한 동포 네트워크 구축(42.6%), 비핵·평화 국제공감대 확산(41.3%),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 지지활동 전개(40.9%), 동포사회 내의 갈등 해소(39.3%)순으로 선정했다. 각 지역별 평화통일 원탁회의를 통해 토론과 논의를 마친 후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통일부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는 대북·통일 정책 전반에 관하여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일반시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미래세대 등이 참여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며 주로 통일국민협약안 도출에 중점을 두었다.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참석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논의 주제는 축소하여 우리사회 평화통일의 걸림돌을 먼저 고민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한 후 지역별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같은 대북·통일 정책에 관한 공론 과정은 참석 규모의 제한, 광범위한 의제 범위 및 적절성, 논의 주제의 난이도, 대국민으로 논의의 확장성 등에 아쉬움이 있지만 협약안 및 실천과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미 있는 참고 사안이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험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남북이 분단된 이후 남한 사회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이중성을 지니며 경계 내지 적대 대상이면서 협력 내지 지원 대상이었다.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이념화 되어 보수, 진보를 나누는 척도가 되고 우리 사회 내부의 다른 갈등 요소들과 결합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겪어 왔다. 또한 북한 인식 차이에 따른 대북 정책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권에 따라 방향성을 크게 달리해오며 일관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집권 정부의 이념에 따른 대북 정책은 그 시기 마다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정책 추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요구가 점점 커지고 신고리원자력 및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숙의민주주의를 경험한 우리 사회는 이제 남남갈등의 한 축인 대북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양극화되어 있는 북한 인식과 대북 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지 못하는 대북정책은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의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와 민주평통의 ‘평화통일 원탁회의’는 평화통일 정책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여 토론하고 논의를 이어간 공론화의 시작점으로 의미있는 시도였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통일국민협약이 도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념별, 연령별 남남갈등 요소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우리 사회 내부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합의와 공론을 형성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며 대북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조한범(2006), 남남갈등 해소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박명립(2015), 국민합의 대북·통일 정책, 한반도포럼(남남갈등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향해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종합토론)
허훈(2017), 통일관련 남남갈등 문제점과 해결방안
통일부(2017),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
차승주(2020), ‘통일국민협약’ 이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와 대안적 사회통일교육 방안 모색
권숙도(2021),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본 ‘사회적 대화’의 발전방향 연구
통일부 국민참여 통일플랫폼(2021), 통일국민협약안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17.2분기)
민주평통 평화통일 여론동향(2022.2분기)